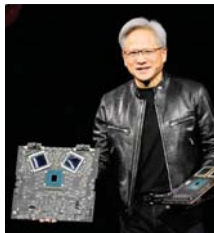


19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56.17 (-29.67)	891.91 (-2.57)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380 (+0.032)	1339.80 (+6.10)

엔비디아
추론시간 5배 빠른
차세대 시칩 공개
02



“공사가 현실화 폐지... 서울 원도심 대개조 10조 투입”

(10년 간)

尹, 스물한번째 민생토론회

영등포 등 ‘뉴:빌리지 사업’ 추진
노후 단지 다운하우스로 재정비

국민 부담 징벌적 과세 바로잡고
중소형 10만호 사들여 저렴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살려내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추진해 도시재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다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원도심 재생, 거주비용 절감, 품격있는 문화 융성을 통해 수도 서울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

방위사업청은 19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5호기(단좌)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진행된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 모습.

방위사업청은 19일 한국형전투기(KF-21) 시제 5호기(단좌)가 제3훈련비행단(사천)을 이륙 후 남해 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KF-21의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진행된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 모습.

/뉴시스

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 공간 기능이 바뀌면서 원도심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단 영등포의 문제가 아닌 서울 전체의 고민이자,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의 고민하고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이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며 “정부는 노후 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

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주비용 절감을 위해 ‘징벌적 과세’를 더 확실하게 바로 잡겠다며 전임 정부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

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결과적으로 집한 채 가진 보통사람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67개의 조세와 부담금과도 연계가 돼 있다”며 재산세 증가 부담, 지역 건강보험료 상승, 노인기초연금 등 복지대상 제외 등을 언급했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신문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오늘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기후위기 대응 정부·민간 맞손 452조 쏟아

기업들이 기후위기 관련 규제에 대처하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금융권이 오는 2030년까지 452조원을 지원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정책금융 투입
저탄소 개선, 친환경 선박 등
연평균 60조 녹색자금 공급

신재생에너지 시설 증설위해
은행, 9조 출자해 펀드 조성

우선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과거 5년간 정책금융기관은 연평균 36조원의 ‘녹색자금’을 공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액을 67%늘려 60조원을 공급한다. 저탄소 개선시 정책금융기관이 우대보증해 저금리 혜택을 지원하거나 친환경 선박 발주시 여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풍력·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증대될 수 있도록 5대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 규모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금이 188조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 등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취지다.

/나유리 기자 yul115@

4년후 노동력 본격 감소... 2032년까지 89만명 인력 필요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 감소 전환
고령층 확대로 제약 여건 심화 예상
사회복지·보건업 등에서 증가 전망

앞으로 4년 뒤부터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하고, 2032년까지 부족한 노동력은 9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 제약 여건도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2032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는 이 기간 31만 6000명 증가한다. 하지만 이는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수준이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까지는 증가하다, 2028년부터는 감소로 전환한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30만9000명 증가하지만, 2027년까지만 증가하고,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양적 축소 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산업으로는 사회복지(75만명), 보건업(24만8000명), 출판업(11만1000명) 등이며, 감소 산업은 소매업(-25만5000명), 도매업(-12만3000명), 사업지원서비스(-8만4000명) 등이 꼽혔다.

직업별로 보면,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돌봄·보건 및 개인서비스직(42.4만명), 보건·사회복지직(29.7만명), 정보통신전문가(12.5만명), 공학전문가(10.4만명)는 취업자가

증가하는 반면, 매장판매직(-24.8만명), 교육전문가(-7.8만명), 운전운송직(-6.1만명), 제조단순직(-5.8만명) 취업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는 90만명에 육박했다.

고용정보원이 중장기인력수급전망과 함께 추가 필요인력 규모를 전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자 수 감소 원인이 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고도화 방안 연구’도 병행 추진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돼야 할 필요인력 규모를 처음 전망했다는 설명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될 것”... 서대문·동작 지원 사격 /사진 뉴시스
▲ 민주 “이종섭 출국은 대통령 게이트... 즉각 소환하고 특검 수용해야”

▲ 국힘, 비례 호남 홀대에 광주·전남 총선 동력상실 우려
▲ 중앙선관위, 4·10총선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



▲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자질 공세에 “알아서 잘 하겠다... 그쪽 일이나” /사진 뉴시스
▲ 국방부, 내주 군의관 2차 파견 검토... “지원규모 파악 중”